자원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도약

전주시, 올해 청소 행정 · 녹색공간 확충 등 행정력 집중

전주시는 올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공원·정원 분야 전반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공을 들였다.

또한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 환경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여기에 기존 매립지 재확보를 통해 매립 연한을 오는 205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하게 만들 '광역폐기물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도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가철과 명절, 김장철 등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해왔다.

또 청소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왔다.

동시에 청소 행정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정책으로 1회용품 줄이기 홍보·캠페인과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녹색도시 조성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덕진공원 입구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열린광장을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고, 창포원을 전통적인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해 덕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새로운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다하고, 학산 치유의 숲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도심 속 치유형 산림 공간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원분야의 경우 정원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정원사 양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으며, 올해 열린 '제5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는 162개 업체 참여와 28억 원 매출 달성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관광자원화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외에도 시는 공공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초록정원관리사'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정원도시 전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권희성 기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성과

전주시, 올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 구축 최선

전주시는 올해 도시·건축·안전 분야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에 대응해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 폐지 및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가 공실 해소와 미활성화 용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내 제1종 근생 불허구간 폐지 등을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난·재해 안전관리 정책을 '예방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공을 들였다.

구체적으로 시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21개 방재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월평·공덕·조촌·미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또 지진·화재·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설 명절,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올해 위반건축물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합법적 건축물 정비를 유도했다.

또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동시에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해 시민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

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량이 많은 △서곡광장 네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였으며, △원당천·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객사천 정비를 통한 하천 범람 예방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치수 안정성도 확보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는 지난 24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원·전주·효자시니어클럽 등 3개 수행기관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함께복지' 시리즈의 일환인 '전주 함께힘!피자'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함께힘!피자' 확대 협력

시, 서원 · 전주 · 효자시니어클럽과 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 함께힘!피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와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는 지난 24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원·전주·효자시니어클럽 등 3개 수행기관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함께복지' 시리즈의 일환인 '전주 함께힘!피자'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아동복지시설 위주로 지원되던 나눔 대상을 청년 계층까지 확장함으로써 세대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과 홍보, 청년 지원 물품 마련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3개 시니어클럽은 간식 제조 및 배달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며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확대 협약을 통해 전주지역 청년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형 사회주택 등 청년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1인 가구 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위주의 '입주세트'와 더불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영양간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정성을 담은 '건강 먹거리' 생산을 통해 아동 돌봄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원·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참여해 직접 만든 화덕피자와 샌드위치, 찐빵은 물론, 윙봉세트와 두부과자, 식혜, 꽈배기 등 다양한 영양 간식이 오는 2026년에도 전주지역 87개 아동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지정후원금을 활용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지정 후원금은 △시니어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 △아동 영양 간식 지원 △청년 정착 생필품 지원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내년도 보육사업 확대 시행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보육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내년도 보육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76억원 늘어난 1986억 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지원 등 각종 보육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보육예산은 학부모의 양육부담 감소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1세 필요경비 지원 △2세 필요경비 지원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준비금과 특성화비, 행사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3~5세 지원 금액이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1세 영아 필요경비 지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 1인당 3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정부의 △2026년 영유아보육료 3% 인상 △기관보육료 5% 인상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2만 원 인상 △아침 돌봄 교사 수당 신설 등도 추진돼 보육환경 전반이 개선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 주민참여예산 지원 '호응'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과 '2025년 주민참여예산(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주지역 노후 공동주택 총 105개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됐다.

또 주민참여예산(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단지가 결정됐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노후화된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한 누수 예방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을 통한 단지 미관 개선 △근로자 휴게시설 도배, 냉난방기 및 가구 구입 등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계획된 사업을 완료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예원교회, 취약계층 위한 백미 40포 기탁

전주예원교회(담임목사 이희근)는 성탄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백미 40포(170만원 상당)를 효자5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성탄절을 맞아 나눔과 이웃사랑의 의미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교회가 위치한 서곡 지역의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예원교회는 매년 연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와 라면 등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효자5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